

# 시권익위,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최후 통첩

### 최영태 권익위원장, 광주시·시민모임에 수정안 제시 중립인사 7인 공론화위 구성·속의형 조사 방식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속의조사로 진행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하며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광주시가 협의를 거쳤고, 광주시의 사과가 우선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 구성을 통해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정 방안을 통해 광주시의 뜻에 따라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방식은 시민모임의 주장대로 속의형 조사 방식으로 한다"면서 "오는 13일까지 양측의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속의형조사를 확정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중립인사 7인 구성안을 주장하고, 시민모임은 중립인사 구성안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속의형조사만을 주장하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립적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광주시의 주장과 시민참여형 속의조사 방식을 요구한 시민모임 측 주장을 각각 1개씩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내 줄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한다"면서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결정 시기를 못박았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13일까지 회신하고, 이 같은 제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 차원의 공론화는 즉시 중단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그는 "그동안 공론화를 추진한 경우 여론조사부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신고리 원전의 경우 50일, 대입제도 경우 40일 걸렸는데, 광주 도시철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수정안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현재 수용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별다른 공식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시민모임 신선호 공동대표는 "그동안 7차례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중립적 인사 7명, 광주시의 시민모임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하는 안을 합의했지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집었다"면서 "이에 대한 광주시의 사과는 먼저 받고, 이후 신뢰를 갖고 광주시와 협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사과 없는 수정안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제시한 13일 회신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찬바람이 불면 도시철도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찬바람' 분위기를 권익위가 반영한 것뿐이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12일과 13일 회의의

통해 최종 입장을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이 최종안인 권익위의 이번 수정안을 거부할 경우, 권익위 차원의 공론화가 중단되고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논란은 장기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론화 설계작업, 시민에 대한 홍보,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여론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의 순으로 공론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배심원단은 지역과 연령, 지하철 찬반 등을 고려해 300여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2주 정도 정보를 제공한 뒤 11월 초 1박 2일 합숙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 전달과 토론 등을 거쳐 투표로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광주시가 속의형 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만약 한쪽이라도 제안을 거부하거나 제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권익위원회 손을 떠나 광주시장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주요 관광지 무료로 와이파이 쓴다

### 문제부 구축지원사업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등 광주지역 관광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방한 외래 관광객의 관광정보 서비스 환경 개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등 34곳의 관광지에 총 사업비 6억5400만

원(국비 7800만원, 시비 3억1400만원, 통신사 2억6200만원)을 투입해 11월까지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1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되면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관광정보 서비스 환경 개선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9광주세계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지원 및 광주관광 활성화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지난해 결손 지방세 135억

### 3년전보다 38.7% 증가

정수를 포기해 결손 처분되는 광주시 지방세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장재성(민주당·서구1)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손 처분된 광주시 지방세는 135억4000만원이다.

결손 지방세는 2015년 97억6000만원, 2016년 128억9000만원, 2017년 135억40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무려 38.7%, 37억8000만원이 늘었다.

지방세가 결손처분 되더라도 추후 징수 과정에서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추가 징수하기도 하지만, 현재 여건상 결손 처분은 사실상 세금 징수는 힘든 실정이

다.

장 의원은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시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 숫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직원은 모두 19명이지만 7명이 결원상태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은 68명·대구 35명·인천 55명·대전 31명·울산 35명으로 광주시 가 가장 적다.

장 의원은 "매년 결손 처분되는 지방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납세 불성실자에 대응하는 제재를 하고 과세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화전당 110억 구상권 행사 정부 결단 촉구"

### 이용섭 시장, 재검토 요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월 단체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인 가운데(광주일보 2018년 8월 30일자 1,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이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월 단체를 상대로 110억 원에 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히 걱정스럽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5·18 진실규명의 연장선이자 5·18 마지막 항쟁지에 있던 오월 영령들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송고한 뜻을 계승·발전 시켜 가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러한 광주에 대한 열망에

응답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구상권 행사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문제의 발단이 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촉구 농성'이 갖는 역사적·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갈등 해소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화전당 측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맡은 대립산업 등 4개 업체가 제기한 '공기 지원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이들 업체에 2016년 1월 110억원을 배상했다. 이 금액은 5월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복원 보존'을 요구하며 200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공사 현장에 점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시립도서관 간부 갑질 진정서 광주시 감사위, 조사 착수

광주시립도서관 간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A씨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한 내용을 정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도서관 일부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A씨의 갑질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그때마다 녹취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감사에게 막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이전 근무 직원들도 A씨의 갑질이 시달렸다는 증언이 잇따라 조사를 전일 근무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물의를 빚은 A씨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총리 동방경제 포럼 연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할트마긴 바탈루 몽골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 명품 강소기업 키운다

### 전담 사무국 운영 120기업 관리

광주시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에 광주대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명품강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담 사무국을 만들어 운영하고, 120개 기

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16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장, 명품강소기업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하반기 명품강소기업육성협의회를 개최해 명품강소기업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5년간 명품강소기업 100개사 및 프리(PRE)-명품강소기업 20개사를 발굴한 바 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정부 한 국형 허던 챔피언 육성 공모사업인 '글로벌 강소기업'에 23개사가 선정, '월드클래스 300'에 6개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명품강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관과 금융기관을 추가해 협의회를 확대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기업 건의사항인 R&D 및 마케팅 인력지원과 명품강소기업만으로 구성

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운영 등을 논의해 2019년도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2단계 사업으로 지금까지 선정된 명품강소기업 100개사와 PRE-명품강소기업 20개사를 총량제로 운영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기업중심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명품강소기업 사무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R&D 및 마케팅 분야 전문 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